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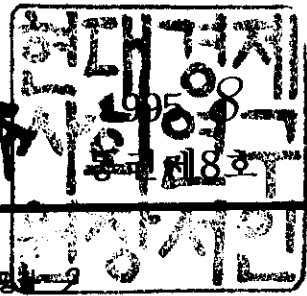
The Reunified Korean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5. 8 통권 제8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권 두 언 / 시와 음악이 흐르는 통일 국가를 준비하며 / 최명

특별기획

스칼라피노 교수와의 대담 / 이홍영 4

이달의 초점

김일성 사후 1년 - 남북관계 / 장주석 27

시사특집

대북 경수로 지원 전략

- 대북 경수로 지원의 의의와 향후 과제 / 김영목 32
- 대북 경수로 지원의 문제점과 정부의 전략 / 전성훈 44
- 대북 경수로 지원과 기업의 전략 / 이용환 51

현안

남북 경협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움직임과 역할 / 최수영 58

연구논단

- 대북 쌀 지원과 남북한 경제 협력 / 이동휘 64
- 북한의 주택 사정과 통일후 정책 과제 / 박헌주 77
- 북한의 군수 산업과 민수화 전망 / 정영태 89

내가 겪은 북한

출신 성분에 따른 간부 임명과 처벌 원칙 / 임영선 108

인물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2) / 유영구 111

통일다리

북한의 관광② / 정석홍 123

시와 음악이 흐르는 통일 국가를 준비하며

최평길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하나의 역사적 사명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산가족들은 그야말로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의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이와 아울러 통일의 시기와 방법,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내 여론 선도 계층 1,0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해 본 결과 '북한의 점진적 개방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7할, '북한의 붕괴로 남한이 북한을 인수하게 될 것이다'가 2할,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게 될 것이다'가 1할 정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통일이 남한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견을 대부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 50여명의 남북한 문제 전문가를 델파이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 남북통일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2005~2010년 사이에는 달성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따라서 급진적인 통일이건, 점진적인 통일이건 간에 남한이 북한을 책임져야 하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어떻게 포용하고 통합하여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통일을 대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통일비용 조성,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각각 3할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주변 4강의 외교여건 조성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할이 되었다. 그리고 북한을 접수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자는 것도 1할을 차지하고 있다. 즉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 조성, 인재 양성, 외교여건 성숙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약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와 이에 따른 생활수준의 차이, 분단 이후 체제의 차이로 인한 생산성의 격차, 이질화된 국민정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 따른 혼란 등으로 사회와 국가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 북한은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급한 먹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옥수수로 연명하여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유행하는 펠라그라병, 영양부족으로 인한 피부병, 결핵, 안짱다리, 무분별한 취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가락부터 뼈마디가 썩어 들어가는 특반성 괴저병이 유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하루 세끼 강냉이와 콩만 먹는데 이것마저 없으면...'이라는 유행어가 나돌고 있다.

그래서 남한과 일본에서 쌀을 원조해 가고 심지어는 취학아동의 학교 급식용이라는 명목으로 UNESCO에 5천분의 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집트에도 약 10만 톤의 무상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집트가 재정난을 이유로 북한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남한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번영시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있다가는 통일로 인해서 사회 혼란과 경제 침체, 실업 증가, 정치 혼란으로 연결되어 생활 수준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낭만적으로 통일을 기대하던 국민의 불만이 다시 정치경제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통일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제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관한 정보는

과거처럼 정보부나 제한된 정보기관의 점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정 분야에서 정보 수집 능력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북한시장 개척팀, 대학연구소가 앞서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 정보기관, 대학연구소, 기업의 북한시장 조사팀, 군, 그리고 정부의 관련 정보분석팀이 하나가 되어 앞으로 북한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접수관리 대책을 흔들림 없이 수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가 각 부처, 대학, 기업의 능력있는 전문가를 모아 북한체제 붕괴시나 통일 과정에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의 시장체제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각 분야의 대북한 지원 역할을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최고통치 차원의 연락업무, 정부 부처의, 기능별 대북 협조, 기업의 전문 분야별 북한 상업시설 재건설 보완, 생필품과 전력 등의 지원 공급책임체계, 금융, 교육분야 등의 역할과 책임자들을 모두 전산 처리시키고 오늘날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도상 연습하듯 '북한접수 도상 연습' 혹은 '통일대비 국민 팀스피리트훈련'을 생활화하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통일 한국은 시와 음악이 흐르는 아름다운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여명이 걸히기도 전에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통일을 단군 이래 세계 최강국 도약의 호기로 삼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도 국가 모든 조직이 체계적으로 연결된 통일대비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